

중국의 다민족¹⁾ 인식 및 정책: 관방의 정책과 학계의

관점*

서정경** · 차창훈*** · 원동욱****

<目 次>

1. 서론
2. 중국 다민족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주요 내용
 2. 1. '민족자결'에서 '민족자치'로
 2. 2. 소수민족 간부 양성 정책
 2. 3. 소수민족의 중화민족화
3. 다민족정책에 관한 중국 학계의 주요 논의
 3. 1. 공산당 통치 정당성 강화 추구
 3. 2. 반민족분열
 3. 3. 소련 다민족정책과의 차별성 부각
4. 결론

1. 서론

* 이 연구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101).

** 서정경(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차창훈(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원동욱(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교신저자

1) 중국에서는 '다민족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소수민족정책' 혹은 '민족정책'이라는 용어를 더욱 보편적으로 쓰고 있으나 본 글은 연구의 취지에 따라 다민족정책으로 다수 표기하였음을 밝힙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통해 근대 중국의 모순 및 낡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새롭고 부강한 신중국의 건설을 추진한 이래, 중국은 줄곧 사회주의의 원형을 자신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실천론적 입장과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에 기반한 실사구시적 행태는 오늘날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교묘한 변형을 탄생시켰다.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한다는 이 같은 유례없는 정치적 경제적 대실험을 통해 중국은 영국의 산업혁명보다도 크기와 규모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대부흥(中華民族的大復興)’을 국가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게 있어 다민족정책의 제정 및 발전방향은 심대한 중요성을 노정하고 있다. 주지하듯, 총 56개의 다민족으로 이뤄져있는 중국에게 있어 한족이외의 소수민족이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중국이 추진하는 국가통합과 현대화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위치는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며 주변국과 민족성분이 겹치는 과계민족을 국민으로 포함하고 있어 늘 주변국과의 국경분쟁 및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또한 중국내 소수민족 자치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현대화의 전면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민족, 특히 중화민족(中華民族)의 개념은 현 사회주의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의 영토에 살았던 모든 민족, 부락 및 여러 형태의 집단들을 다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전에 소수민족은 노예제 또는 봉건농노제의 속박을 받아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신중국 성립이후 정부의 민족정책에 의해 소수민족들이 비로소 진정한 평등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 관방의 민족 인식 및 정책노선은 오늘날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기치하에서 중국이 공산당 1당 체제의 유지라는 최저선(bottom line)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적극적 시도를 통해 공산당 통치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하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중국의 다민족 인식 및 정책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국내 현안을 파악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정책 차원에서도 중국의 대응양태 및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중국의 민족정책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되, 신중국 성립이후 중국 관방의 민족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중국 학계의 주요 다민족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고 그것의 내재적 의도를 탐구하였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한 관방과 학계의 거리가 비교적 근접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민족정책에 관한 중국 주류 민족학자들의 견해와 논지를 분석하고 논문에 잠재되어있는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명분아래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국가적 비전 추구에 종속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정책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내부 학계의 시각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부의 민족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도 매우 유의미하다 하겠다.

2. 중국 다민족정책 형성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1 ‘민족자결’에서 ‘민족자치’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및 수립 초기 중국의 다민족정책은 소수민족의 자결권 및 분리까지도 용인한 ‘민족자결’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민족의 자치권은 인정하되 분리는 제도적으로 막는 민족자치의 입장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고 오늘날 민족자치는 중국의 다민족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원칙이

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현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중국 성립 이전 당과 지도층 엘리트들의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 및 이념적 배경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2년 7월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회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연방제를 통해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이렇게 공산당이 연방제 실시를 주장한 것은 무엇보다 당시 러시아 및 국제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공산당 건립초기였기에 중국은 자신의 민족문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할 성숙한 방안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제국주의가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고 지방의 각군벌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제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은 먼저 군벌통치를 척결하고, 인민이 중국을 통일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면, 각소수민족지역도 군벌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자치연방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중국과 함께 중화연방공화국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²⁾

1930년대 들어 중국 공산당의 연방제에 관한 입장은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민족자치제도가 초보적으로나마 국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으로 확정지어졌다. 중국의 민족지역자치는 단일한 국가내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되,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제하에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여 국가 및 민족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뜻한다.³⁾ 당시 9·18사건 등 일본에 의한 중국 동북지역 침략이 가시화되며 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정책을 점차 조정하여 민족자결과 연방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통일국가에서 지역자치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단결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였다.⁴⁾ 특히 1934년10

2) 董世明, 〈從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轉變〉《湖北社會科學》, (2010年第11期).

3) 編輯委員會, 《當代中國的民族工作》, 1993, p.229.

4) 董世明, (2010) p.82.

월 시작된 공산당의 대장정으로 인해 홍군은 각지역의 소수민족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었고 민족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36년 8월, 예해(豫海)현에 처음으로 회민(回民)자치정부가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민족자치정권 건설의 첫번째 예이다. 1937년 노구교사건이 발발하고 전국에서 항일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8월22-25일 공산당은 협북낙천(陝北洛川)에서 정치국확대회의 개최시 항일구국 십대강령을 발표하여 “몽골족, 회족, 기타 모든 소수민족을 동원하여, 민족자결 및 민족자치의 원칙하에 항일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중공중앙과 마오쩌둥은 이미 민족자결과 민족자치를 묶어서 이 문제를 항일구국의 십대강령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하여 전국민에게 공포하였다. 다음해인 1938년 11월 마오쩌둥은 “신단계를 논함(論新階段)” 보고서를 통해 항일민족통일전선은 국내 각 당과 각 계급의 일만이 아니라, 국내 각 민족의 일이기도 하다며 각 민족을 단결하여 공동으로 일본에 대항하자고 호소하였다. 각 민족이 한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지며, 한족과 통일국가를 건립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소수민족과 한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그곳의 지방정부가 당지소수민족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하나의 부처를 만들고 자신들과 관계된 업무를 관리하게끔 하자는 그의 사고는 이미 중국의 민족정책이 자치라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47년 5월 1일, 내몽골자치구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신중국 성립 후 중국공산당의 통치하 건립된 첫번째 성급 민족지역 자치정권이었다.

1949년 신중국의 정식 수립 이후 공산당의 다민족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몇차례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우선 1949년 정권수립부터 1958년까지는 중국 소수민족정책이 정립된 시기로 평가된다.⁵⁾ 이기간 동안 중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서 민족정책을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분리하여 “각 소수민족이 모여사는

5) 정재남, 《중국의 소수민족》, (서울: 살림출판사, 2008년) p.57.

지역에서는 민족의 지역자치를 실행해야 한다. 모여사는 민족의 인구 및 지역의 크기에 따라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각기 설립한다”라고 규정하였다.⁶⁾

1952년,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실시강요(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반포하여, 민족자치구 및 자치기구의 성격과 지위, 민족자치구 및 자치기구 건립방법, 자치기구의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이 “실시강요”는 신중국 성립 후 중앙인민정부가 민족지역자치에 관해 제정한, 기본법성격을 띤 첫번째 문건이다. 이듬해인 1954년 헌법에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국가의 근본법규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1955년과 58년에 소수민족 거주지역이 비교적 크고, 거주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녕하회족자치구가 연이어 건립되었다. 가장 초기에 설립되었던 내몽고자치구와 함께 총 4개의 성급 자치구, 29개 자치주, 54개 자치현이 마련되었다. 1965년에 티벳자치구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의 민족지역자치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⁷⁾ 2003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4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0개의 자치현으로 구성된 155개의 민족자치지역을 구비하고 있다. 55개의 소수민족중 44개가 자치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소수민족 인구가 소수민족 총인구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면적으로 보면 전국 국토 총면적의 64%에서 민족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⁸⁾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5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4개의 자치현 및 약 1000여개의 자치향으로 구성되어졌다.

다음으로 중국이 1954년 실시한 민족식별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관방은 맑시즘의 민족이론에 근거하여 단일한 “언어”, “지역”, “경제”, “문화”라는 네가지 기준에 따라 민족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1956년 소수민족언어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학원과 중앙민족사무위원회가 언어조사팀을 파

6) 李艷杰, 〈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及其影響〉《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217.

7) 董世明, 〈從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轉變〉《湖北社會科學》, (2010年第11期).

8) 代偽, 梁曉宇, (2010), p.46.

견하여 15개 성,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또한 같은 해에 소수민족 사회역사 조사를 전인대민족위원회, 중국과학원민족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⁹⁾

1966년에서 10여년에 걸쳐 중국의 사회 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화대혁명시기를 거치며 중국의 민족정책도 심각한 후퇴를 경험하였다. “사회주의시기 민족문제의 실질은 계급문제”라는 인식이 성행하면서 한족우월주의가 대두하였다.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고 소수민족 간부가 숙청되는 등 박해가 자행되면서 민족간 분열이 심화되어지고 민족정책은 일대 혼란기를 겪었다.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되고 중국의 다민족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선 문화대혁명시기 후퇴되고 왜곡된 민족관계 및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문화대혁명시기의 계급관에 기반한 민족관을 편향된 인식으로 규정, 이를 부정하였고, “현단계 각 민족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인민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인식이 제시되었다. 1979년 4월 개최된 전국 변방공작회의에서는 “국가는 현대화 실현 과정에서 소수민족이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도와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 및 각종 전문기술 인재를 배양해야 하며, 역사가 남긴 사실상의 불평등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각 소수민족들이 한족의 발전수준을 따라오거나 혹은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¹⁰⁾라고 밝힘으로써 민족 업무의 중심이 4개현대화 건설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냈다. 1984년5월 제6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에서 민족 지역자치법이 통과되어지며 “평등”, “단결”, “사회주의” 민족관계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었다. 이 시기는 의식주(溫飽)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소수민족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무역의 “세가지 고려(三項照顧)”지역을 지정하는 등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표면적인데 그치는 것으로서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실질은 우선 한족들에게 다수의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는 차별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소수민족과 한족간 경제적 차이를 축소시

9)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pp.141-142.

10) 《國家民族政策文件選編(1979-1984)》,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p.10.

키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자간 경제적 격차는 상당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개방의 수혜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족에게 주로 배분되는 동안 각 지역의 토착 소수민족과 한족간 갈등의 수위는 제고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추세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의 민족정책도 일정한 변화를 수반한 90년대 이래에도 지속되고 있다. 냉전 기간 동안 체제내 잠재되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민족분규 및 종족갈등문제 등이 외부로 분출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중국의 민족정책도 민족간 단합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였다. 1992년 1월 및 1999년 9월에 개최된 중앙민족업무회의에서 1990년대 중국의 민족업무의 주요임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민족지역자치체도를 굳건히 견지한다. 소수민족간부를 대량 배양해야 한다. 각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민족업무에 대한 당의 확고한 지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같은 정치적, 수사적인 정책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족 위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전국에 대한 통치 정당성을 유지시키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위구르지역, 티벳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의 지지도는 높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분리독립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2.2 소수민족 간부 양성 정책

소수민족 간부 양성은 오늘날 중국의 민족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내용이 되고 있다. 이미 신중국 성립초기부터 모택동은 소수민족 간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1949년11월 마오쩌둥은 <서북 소수민족 업무 지시에 관해>에서 “청해, 감숙, 신강, 영하, 섬서 각성위원회 및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

11) 1992년 중앙민족업무회의의 경우 葉派, “1992年中央民族工作會議,”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971-2 참조, 1999년 중앙민족업무회의의 경우 葉派, “1999年中央民族工作會議,”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976-8 참조.

의 지방위원회는 소수민족 간부훈련반 혹은 간부훈련학교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¹²⁾ 1950년11월 국무원 제60차 국무회의는 <소수민족간부양성실행방안>과 <중앙민족학원실행방안> 두문건을 통과시켜서 처음으로 각종 소수민족간부의 양성 형식에 대한 과학적 규범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정규 간부학교를 개설한다는 설계를 확정지었다.¹³⁾

그러나 중국사회를 현격한 후퇴로 이끌었던 문화대혁명의 10년의 혼동기동안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 양성 작업은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인정한 1978년 제11차 삼중전회이후에야 “공산주의 각오를 가진 소수민족 정치 간부 및 전문기술 인재를 소수민족지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하여야 한다.”라는 방침이 정해졌고 소수민족 간부 양성 작업은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1980년 8월 덩샤오핑은 “문화발전, 민족간부 양성에 노력하여 민족간부를 지식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여 더욱 힘을 실었다.¹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내륙지역과 연안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불평등, 실업, 황금만능주의, 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하면서 민족간 갈등요인도 확대 심화되는 추세가 전개되어지면서 소수민족 간부 양성의 필요성도 더욱 제고되어졌다. 장저민(江澤民) 주석은 1993년 한족은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은 한족과, 그리고 소수민족 서로간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3개의 떨어질 수 없다는 사상(三個離不開思想)”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민족정책의 정당성을 담보 받고자 하였다. 2002년 중국 국무원은 <개혁을 심화하고 민족교육을 더욱 신속히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教育的決定)>에서 “소수민족 고위층 인재 양성 계획의 실시는 2003년부터 몇몇 중점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소수민족과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특수한 조치를 통해 소수민족 박사, 석사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12)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1994.) p.42.

13) 陳沛照, 〈中國共產黨少數民族干部教育政策探析〉《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09年 10月 第5期).

1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鄧小平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論述專題摘編》, (北京: 人民出版社, 1995), p.410.

다음해 4월 교육부관공청은 소수민족 고위층 인재 양성계획 포럼을 개최하여 “소수민족고위층인재양성계획(少數民族高層次人才培養計劃)”의 실시방안 및 관련정책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2004년 7월에는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위, 재정부, 인사부 5개 위원회의 연합하 <소수민족 고위층 인재를 힘껏 양성하는 것에 관한 견해(關於大力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的意見)>를 공포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소수민족 고위층 주요 인재 양성계획의 실시방안(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計劃的實施方案)>을 공식 제시하였고 이듬해부터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이 실시방안은 인재양성에 관한 10가지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밝혀놓았다.¹⁵⁾

소수민족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고위간부로 선발하여 중국 관방의 지시에 따르는 민족간부로의 양성 및 이의 확대는 민족에 대한 공산당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민족간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상호 갈등적 상황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신중국 성립초기부터 중시해온 소수민족 지도자 양성계획의 일차 목표가 소수민족들의 순수 권익 보장에 있다기보다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위한 정치적 통합성 제고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상황에서 보자면 민족간 갈등 해소 및 정치적, 실제적 평등의 길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2.3 소수민족의 중화민족화

과격한 사회주의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유산을 지닌 문명국임을 부각하려는 의도하에 중국정부는 자신의 전통문화 및 역사를 더욱 정교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5월부터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을, 2003년 11월부터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15) 王麗萍·楊春洪, <“關於大力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的意見”的制定與實施>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1648-9.

공식 실시하여 현 중국의 국경선 내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역사는 고대로부터 줄곧 중화민족이자 중국의 역사라는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은 하상주단대공정을 통해 구체적 연대가 판명되지 않은 하상주 고대국가의 연대를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 하왕조는 기원전 2070년에,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에, 주왕조는 기원전 1046년에 시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기원전 841년 서주(西周)말 공화(共和) 원년으로 알려진 중국역사의 가장 이른 시기를 1200여년이나 끌어올렸고 이로써 중국의 역사시대는 총 4070년이 되었다. 다음으로 중화문명탐원공정을 통해 전설과 신화로만 알려졌던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를 역사적 사실로 만듦으로써 중국의 역사를 5000여년에서 최고 1만년전까지 끌어올리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¹⁶⁾ 실제로 중국학계내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삼황오제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사를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중화문명을 확대시키고 민족주의를 발양하려는 의도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관방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 하겠다.

이 외에도 1986년부터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국경정리와 운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남공정(西南工程)을 진행시킴으로써 티벳을 지방정부로 격하하였고 중화민족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티벳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북공정(西北工程)을 진행시킴으로써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을 막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동북공정(東北工程)은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포함한 동북지역의 고대

16) 중화문명탐원공정이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보면 (1) 고문헌의 요·순·우(禹)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 성과 정리 (2) 중국 천문학의 기원 연구 (3) 예제(禮制)의 기원과 연구 성과 정리 (4) 허난성 서부 및 산시성 남부 지역의 용산문화부터 이리두 문화까지 고고학 문화 계보 (5) 용산문화시대부터 하나라 초기 때까지의 취락형태가 보여주는 사회구조 (6) 용산시대부터 이리두 시기까지의 야금기술 및 유적,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7) 초기 각종 부호 및 문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8) 생태환경 평가 (9) 문명기원에 대한 이론과 방법, 연구 성과의 종합 (10) 탄소측정 방법 연구 등 총 11개 과제다.

역사와 문화를 모두 중화민족사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¹⁷⁾

3. 다민족정책에 관한 중국학계의 주요 논의

3.1 공산당 통치 정당성 구축

사회주의를 제창하는 중국에서 학계는 관방과 상당한 일체성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비록 개혁개방이후 점차 중국학계가 관방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하지만 민족문제의 특수성 및 민감성으로 인해 특히 민족학 연구 학자들은 대개 공산당 일당독재의 유지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려는 중국 관방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글들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민족학 영역의 중국학계는 관방과의 일체성이 특히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민족정책에서 초기의 민족자결권 입장이 민족자치권 입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중국관방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시각이 있다.¹⁸⁾ 리푸창(李富強)은 중국이 신중국성립초기 연방제를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연방제를 버리고 민족지역자치를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으로 확립한 이유로 첫째, 민족지역자치가 민족평등 및 민족단결의 실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거 중국이 한족이 타민족을 통치하고 다른민족을 압박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지역자치가 중국역사발전의 실제 상황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장기간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각민족은 빈번하게 이동했으며 점차 대거주지, 소거주지를 형성하고 서로 교차하고 함께 또 흩어져 사는 분포상황을 형성하였다. 민족지역자치를 실

17)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년) pp.147-150.

18) 李富強, 《對中國民族政策“反思”的反思》《桂海論叢》, (第25卷 6期, 2010)

행하는 것은 집거하는 민족들이 자치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섞여사는 민족들도 자치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경제발전의 필요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자원분포와 경제발전은 매우 불균등하다. 소수민족지역은 땅은 넓고 자원은 많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가 비교적 낙후되었다. 한족지역은 인구는 많은데 경제는 비교적 발달되어있지만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족지역은 소수민족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필요하고, 소수민족지역은 한족지역의 선진기술과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 때문에 한족과 소수민족간 단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 혁명운동의 발전은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혁명투쟁 중, 각민족들은 일치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여 깊은 우의를 맺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창시한 민족해방강령은 각민족인민의 찬성과 지지를 얻어왔다는 것이다. 다섯째, 민족지역자치의 실행은 제국주의와 국제적대세력의 분열 진복 활동을 좌절시키는데도 유리하며 국가통일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자고이래 “다민족 통일대국”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현 중국 영토내에 존재하는 민족의 문화적 실체와 정치적 실체를 교묘히 섞는 시각이 있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민족학 및 사회학원장 양성민(楊聖敏)은 “중국은 다민족 통일대국으로서의 필연적 원인과 심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中國作爲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중국이 자고이래로 통일된 다민족국가였다고 역설하였다.¹⁹⁾ 양성민은 2009년 8월1일 봉황채널의 “중국민족문제의 고찰과 사고”라는 주제의 世紀大講堂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같은 맥락의 논지를 피력함으로써 이를 시청하는 중국 인민들의 중국민족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 민족정책의 전개 및 변화과정을 분석한 중국 학계의 학술논문들은 대개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 및 정책의 기초는 맑스레닌주의 민족사상임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민족관은 첫째, 민족은 공

19) 楊聖敏, 〈中國作爲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民族論壇》, (北京: 2009년), pp.16-7.

동의 지역, 언어, 경제 및 심리(문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공동체라는 것이다. 둘째,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은 민족평등이라는 것이다. 넷째, 민족과 민족운동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반위에 레닌이 무산계급 민족강령을 제정하여, 당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민족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맑시즘 민족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것이다.²⁰⁾ 또한 중국 민족정책의 성과로서 사회주의 체제하 실시되는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성공을 꼽고 맑스주의 민족관은 무산계급정당이 민족강령 정책을 정확히 제정하고, 민족관계를 협력시키며,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 업무를 순조로이 전개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이론무기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민족지역자치는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중국의 실제 민족상황을 서로 결합하였고, 고금을 막론하고 민족문제 처리의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만들어냈기 때문에 중국의 실정에 가장 맞는 것이라는 주장이다.²¹⁾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고 이러한 민족들은 모두 민족지역자치제도에 따라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받는다라는 주장이다.²²⁾

또한 중국 학계내에는 중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어온 소수민족 간부 양성작업이 중국 민족간 분열을 방지하고 중국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실시를 통해 중국은 소수민족이 민족지역 자치를 실행할 권리를 보장하였을 뿐 아니라, 구중국의 많은 민족지역에 존재했던 할거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조국의 변방지역의 안정을 공고히 하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민족의 단결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정치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각민족간 관계도 날로 발전하여 점차 “한족이 소수민족을, 소수민족도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상호간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漢族離不開少數民

20) 余信紅, 〈試論中國特色社會主義的民族理論, 政策與實踐〉《學報》, (2009年 第6期), pp.56-7.

21) 代偽 梁曉宇, 〈建國六十年來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發展〉《延邊黨校學報》, (24卷 5期 2010年 2月)

22) 郭維利 何文鉅, 〈民族區域自治:統一多民族中國的最佳選擇〉《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2007年 5月 第18卷 第2期).

族, 少數民族離不開漢族, 少數民族之間也相互離不開)”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²³⁾

2009년 신장 7·5사태 이후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피력한 논의들이 국내외에 등장한 바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8월2일 聯合早報網에 실린 일본법정대학 교수 짜오홍웨이(趙宏僞)의 글(日本の民族政策和中國的民族政策)에서는 중화민국시기 자생민족(自成民族)이던 만, 몽, 장, 한을 포함 이들은 모두 만인, 몽고인, 장인, 한인 등의 용어로 쓰였었고, 족(族)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만족, 몽고족, 장족, 한족은 모두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창조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공산당 창조설’을 제기하였고 이같은 관점은 중국학계와 언론계에 일정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해외 학자들을 통해서도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2000년 Lynne Rienner출판사에서 출판된 K.Palmer Kaup의 <Creating The Zhuang: Ethnic Politics in China>에서 저자는 공산당 창당이전에는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장족(壯族)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공산당이 소수민족정책을 수립한 초기 17년동안에도 장족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950년대 초기만 해도, 광서지방의 대다수인들은 자신이 장족신분임을 부인했고, 자신이 한족이라 여겼지만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지역에 근거하여 모두 장족의 지류라 여겼고, 1953년 돌연히 중국의 최대의 소수민족은 장족이라 선포하며 광서 장족자치주를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내외의 공산당민족창조설에 대면하여 리푸창(李富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²⁴⁾ 장족의 명칭이 이미 공산당 성립 훨씬 이전 송대시기에 이미 중국에서 撞(zhuang), 僮(zhuang) 등으로 불렸었고, 위구르족도 역사적으로 13세기초에 이미 畏兀儿이란 명칭이 있었고, 점차 위구르족이 된 것이라 주장하며, 장족이거나 위구르족이건 그들의 민족정체성의식은 모두 긴 역사적 과정중에서 형성된 것이며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만

23) 李艷杰, 〈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及其影響〉《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227-8.

24) 李富強, 〈對中國民族政策“反思”的反思〉《桂海論叢》, (2010年 25卷 6期).

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리푸창은 서구학자들이 중국의 민족정책을 왜곡하는 이유는 서구의 족군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첫째, 초생론(primordialist), 둘째, 정황론(Circumstantialist) 또는 도구론(instrumentalist)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자는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성이란 공동문화라는 근본 감정과 연결된 것이라 보는 것이고 후자는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성은 일정한 사회배경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관방의 다민족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적 관점에 대한 재비판적 시각은 오늘날 중국학계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2 반민족분리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이 중국의 통치권내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핵심적 국익으로 자리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90% 이상이 신장과 티베트, 내몽골, 운남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신장과 티베트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의 불씨가 살아있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동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 1993년이후 중국사회내 집단 소요사태는 2005년에 8만 7천여건, 2006년엔 9만을 넘었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⁵⁾ 특히 2009년 7월 5일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유혈 민족사태가 발발하여 중국내 소수민족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여 중국 학계내에서는 민족분리 및 그로 인한 국토의 분열사태에 반대하는 주장이 담긴 글들이 양산되어졌다. 신장 7.5사태 발발후, 일부 적대세력들이 소수민족의 민족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을 개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역시 서방의 민족관념이 먼저 들어간데 따른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민족의식은 주권, 영토 등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민족자결, 민족독립과 긴밀히 관련

25) 陳星博, 〈當前西部多民族地區社會穩定問題的新特點與對策〉《社會發展》, (2010년 제1기), p.58.

되어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민족은 주로 중원 한문화와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수천년동안 하나의 통일된 중앙집권제 국가였고, 각 소수민족은 본민족정체성을 가진 동시에 중원지역과 중앙정부에 대해 일종의 원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 “다원일체”의 족군공동체에 대해 일체감(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관계의 구조 실체는 중화민족다원일체라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사조 속에서 정확하고도 적당한 민족의식은 각민족이 자신의 정확한 현대화의 길을 탐색하고, 현대화 세계화과정 중 민족문화를 전승 및 발전시켜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데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민족의식은 반드시 중화민족 정체성 의식의 범주내에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민족분열주의라는 늪에 빠지게 될 것이며 중화민족에게 재난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²⁶⁾

이 외에도 2009년 신장 7.5 사태 발발이후, 위구르족, 장족 등 소수민족 개념은 어차피 공산당이 만들어낸 것이고, 민족정책을 통해 민족간 경계를 짓고 민족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족분열주의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니 결국 공산당이 뿌린대로 걷은 것이라는 중국 학계 일각의 “공산당 자업자득설”이 제시된 바 있다. 중국학계내 민족문제 권위자인 마룽(馬戎) 베이징대학교수도 신중국성립이후, 정부가 전개한 민족식별작업과 일련의 제도화조치 및 정책은 실제로 만청혁명당이 족군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중화민족과 56개민족을 모두 정치적 실체의 표현형식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국경선을 기점으로, 후자는 자치지방을 기점으로 하였으며 양자가 비록 수준은 다르지만 기본사고는 유사하다. 민족에게 식별작업을 하고, 각자의 자치지역을 확정된 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사료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민족’이라는 용어를 구성하였고, 사료를 새롭게 해석한 기초위에 ‘민족역사’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이 제시하는 족군문제를 문화화 하려는 사고는 아마도 ‘중국 문화주의’ 족군관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여전히

26) 李富強, (2010) p.40

‘중국 문화주의’ 족군관과 ‘민족주의’ 족군관, 이 두가지 복선의 역사적 궤도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진행 과정중 각종 탐구와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쟁의 정확성 여부는 사회실천을 통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룡교수의 논지였다.²⁷⁾

이같은 마룡교수의 견해에 대해 리푸창은 마룡교수가 한편으로는 중국 전통 족군관과 족군관계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의 민족정책을 중국민족정책을 평가하려는 좌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 문화주의” 족군관은 중국의 “민족”이 서구의 “민족(nationality)”과는 매우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중국 전통 민족의 분류는 주로 “문화”차이에 기반한 것이었다. 자고로 중국의 중앙왕조는 민족간 차이를 무시한 적이 없고 많은 정책을 취해 민족문제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의 “민족”은 “민족-국가(nation-state)” 서로 연관된 개념으로서, 서방의 자유주의 전형적 민족정책은 바로 “일족일국(one nation, one state)”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nation에서 민족의 지위는 없다는 것이다. 즉 리푸창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는 민족정책이 없었고 다만 국민통합, 국가정체성, 인간 평등성 등을 내재한 국가정책만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구국가들의 민족동화정책은 매우 피비린 내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 리푸창의 논점이다.

3.3 소련 다민족정책과의 차별성 부각

중국의 다수 학자들은 20세기 후반 옛소련제국의 붕괴의 발단은 연방을 구성한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점하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여긴다. 더욱이 발트해 연안의 작은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으로부터 소련의 와해가 시작되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은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에 기반한 다민족정책이 자신의 다민족정책의 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소련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동시에 주

27) 馬戎,《民族社會學:社會學的族群關係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p.613.

력하고 있다.

중국 민족학계의 거물인 하오스위엔(郝時遠)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 및 인류학연구소 소장은 <스탈린 민족 정의의 재해석-독서필기 3: 소련 다민족국가 모델중의 국가와 민족(重讀斯大林民族(нация)定意——讀書筆記之三: 蘇聯多民族國家模式中的國家與民族(нация)>이라는 글을 통하여 스탈린시기 소련의 다민족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스탈린 모델이 주도한 소련의 중앙집권체제는 각민족의 ‘무국가’와 연맹의 ‘무민족’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이원적 민족국가체제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소련이 반민족주의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체국으로 돌아감으로써 결국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분리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²⁸⁾ 이 외에도 소련체제의 중요요인으로서 경제발전의 차이를 지적하며 중국이 민족분리주의 세력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다음으로 정치적 자원을 통해 국가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중앙권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민족독립의 예상된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²⁹⁾

스탈린이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적잖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특히 언어정책, 문화와 역사정책의 결합으로 인해 각 민족의 문화발전 수준이 불균등하게 이뤄졌고 이것이 소련의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³⁰⁾ 이 외에도 소련이 민족연방제를 통해 민족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했던 과정을 분석한 후 소련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연맹국들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 연방제의 실질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다민족국가의 통합을 지향하는 중국이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³¹⁾

28) 郝時遠, 〈重讀斯大林民族(нация)定義——讀書筆記之三:蘇聯多民族國家模式中的國家與民族(нация)〉《世界民族》, (2003年 第6期), pp.9-11.

29) 丁志剛, 〈試析經濟差距與蘇聯解體的關係:兼對多民族國家民族分離主義的思考〉《東歐中亞研究》, (2001年 第3期).

30) 栗迎春, 〈斯大林時期蘇聯多民族文化的發展及其失誤〉《河北學刊》, (2008年 第6期), pp.237-8.

4. 결론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은 전인구의 8%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다수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다민족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른 중국내 통합 유지 여부는 중국이 지금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세계 강대국으로 등극하는데 있어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신중국 건국 이전 및 건국초기에 소수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건국하는 것을 허용하던 민족자결권 입장을 번복하고 민족의 자치권만을 인정하는 자치제도를 거국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소수민족을 위해 실시한다는 여러 정책의 주요목적도 순수하게 소수민족의 삶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방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욱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다원일체에 기반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제창하며 민족간 갈등을 억누르고 국내 안정을 기하려는 동시에 현 중국 국경내 진행되었던 모든 민족들의 경험과 역사를 모두 중국의 것으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도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략적 움직임에 정부와 학계는 고도의 일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특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중국의 민족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와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혼동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천년에 달하는 기나긴 역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관계를 형성해온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족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侯萬鋒, 〈民族聯邦制對多民族國家的政治整合〉《西伯利亞研究》, (2008年 第35卷 1期).

오늘날 “평화적 부상론(和平崛起論)”, “책임 있는 대국론(負責任的大國)” 등 다양하고 세련된 외교수사를 제시하며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면서 전통적으로 자신의 세력범위라 여겨왔던 동아시아 지역내 소프트 파워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우리는 중국의 민족정책의 본질 및 향방에 대하여 냉철한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정재남, 《중국의 소수민족》, 서울: 살림출판사, 2008년.
-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년.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鄧小平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論述專題摘編》, 北京: 人民出版社, 1995.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1994.
- 張原, 〈西南地區多民族和諧共生關係研究'國際學術會議紀要'〉《民族學刊》, 2010年 2月 第2期.
- 楊虎得, 熊坤新, 〈前蘇聯民族政策中的經驗教訓對中國的警示〉《廣西民族大學學報》 32卷第1期 2010年 1月.
- 編輯委員會, 《當代中國的民族工作》, 1993.
- 郝時遠, 〈重讀斯大林民族(нация)定義——讀書筆記之三:蘇聯多民族國家模式中的國家與民族(нация)〉《世界民族》, 2003年 第6期.
- 栗迎春, 〈斯大林時期蘇聯多民族文化的發展及其失誤〉《河北學刊》, 2008年 第6期.
-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在新的歷史起點上再創輝煌: 輝煌歷程-慶祝“新中國成立60周年重點書系”總書〉《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 候萬鋒, 〈民族聯邦制對多民族國家的政治整合〉《西伯利亞研究》, 2008年 第35卷 第1期.
- 余信紅, 〈試論中國特色社會主義的民族理論, 政策與實踐〉《學報》, 2009年 第6期.
- 黃娥嬌, 〈胡錦鄧同志對中國共產黨民族理論政策的發展〉《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09年 8月 第4期.
- 李富強, 〈對中國民族政策“反思”的反思〉《桂海論叢》, 2009년 25권 6기].
- 郭維利 何文鉅 〈民族區域自治:統一多民族中國的最佳選擇〉《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2007年 5月 第18卷 第2期.
- 楊聖敏, 〈中國作為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民族論壇》, 2009년.
- 張文靜 杜軍 〈民族主義與多民族國家的政治合法性〉《廣西民族研究》 2010年 第1期.
- 張文靜 杜軍, 〈多民族中國政治合法性的文化基礎構建〉《廣西民族研究》 2010年 第2期.
- 賀金瑞, 〈論多民族國家協調發展的政治基礎〉《中央民族大學學報》, 2010年 第4期.
- 董世明, 〈從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轉變〉《湖北社會科學》,

2010年 第11期

陳星博, 〈當前西部多民族地區社會穩定問題的新特點與對策〉《社會發展》2010년 第1期.

張麗君, 韓笑妍, 王菲, 〈中國民族經濟政策回顧及其評價〉《民族研究》2010년 第4期.
代爲 梁曉宇, 〈建國六十年來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發展〉《延邊黨校學報》第24卷 第5期.

黃娥嬌, 〈胡錦鄧同志對中國共產黨民族理論政策的發展〉《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09年 8月 第4期.

陳沛照, 〈中國共產黨少數民族干部教育政策探析〉《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09年10月 第5期.

馬戎. 《民族社會學:社會學的族群關係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常士閔, 〈多民族後發國家現代化進程中的族際政治整合與政治文明建設〉《雲南行政學院學報》, 2010年 第3期.

李艷杰, 〈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及其影響〉《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multiethnic policy while driving the nation's goal, 'the Grand revival of Chinese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s of China's multiethnic policy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also scrutinizes the main discussions of Chinese academia which is believed to has certain influence on CCP. CCP once maintains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which permits minor race's right to stablish its own nation, but has changed to minor race's self-governing system. the main purpose of many another multiethnic policies made by CCP, which seemingly very beneficial to minor race, but lies in strengthening its jurisdiction over people in fact. Chinese academia, also develops logic of 'plural races but all in one', helps CCP maintain and strengthen its one-party dictatorship.

CCP mistakenly confuses state, a political substance with race, a cultural community on purpose. China's multiethnic policy not only meets resistance from its minor race, but also leads to some kind of fric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 : China's multiethnic policy, the Grand revival of Chinese people, plural races but all in one, one-party dictatorship of CCP.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